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주요 과제

- 출처 : 한경미래니엄포럼
- 일시 : 2005년 7월 21일
- 연사 :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한국 경제 저성장의 원인

요소투입형 발전 전략이 한계를 맞으면, 경제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나타냄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반갑습니다 먼저 환경 미래니엄 포럼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많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께서 우려하는 질문도 많이 있어서요. 제 주장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서로 의견 교환이 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우리 경제가 80년부터 9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근 10년 동안에 고도 성장의 내적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소투입형 발전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한계에 도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성장률이 경향적으로 하락하는 60년대 부터 10년 단위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보도를 보면 성적이 안 좋을 것으로 대부분이 보고있습니다. 최근에 부의 창출이라는 책을 보니 선진국도 기본적으로 2%대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률이 2%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크게 봐서 신용불량자 수가 400만 가까이 된다든지 비정규직이 56%내외가 돼서 내수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기반이 약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국제유가와 같은 외적 요인이 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이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는 노동생산성이 G7 국가의 63% 수준 정도에 불과 하는 등 기술 혁신 역량 부족에 직면함

저 같은 경우는 내적인 요소인데 노동생산성이 최근에 삼성경제 연구소의 보고를 보면 G7 국가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63%수준입니다. 노동시간당으로 계산하면 더 낮아져서 43%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노동생산성이 낮는데 노동량으로 나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합니다. 그러면 노동생산성이 왜 낮은가 하면 노조가 예 들어서 규율이 약하다든지 과하게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의력 상상력 핵심역량 생산성의 근본적인 요소 기술역량에 큰 장애에 봉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혹은 한계선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더 이상 넘어서기 힘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불균형 발전에서 오는 누적된 결과에서 오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소투입형 발전을 해오면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보면 대체 성숙기 산업이나 쇠퇴기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은 예를 들어 보면 석유 화학 조선이나 중공업 자동차 같은 산업들은 자체가

한국 경제는 노동생
산성은 G7 국가의
63% 수준 정도에 불
과 하는 등 기술 혁
신 역량 부족에 직
면함

원천적으로 쇠퇴기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국제시장의 관계에서 성숙기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의 기계산업도 성숙기 산업이 많고 그 외의 지방은 농업이라든지 광업 같은 1차 산업에 가까운 부류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신발이나 대구 섬유 같은 건 쇠퇴가 진행이 돼서 무너지거나 해외에 나가거나 이런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진행이 돼서 고용능력이 거의 소진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자동차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산업자체가 성숙기 산업이고 노조가 워낙 강해서 신규고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있는 노동자들이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입니다. 지방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기 힘들고 수도권은 성장 초기 산업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인구를 끌어 모으는 힘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은 과밀화문제 지방은 과 소화의 문제가 양쪽에 다 있어서 이게 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요소투
입형 발전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이 극도
로 심화되었기 때문
임

인구변화가 그래프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문제상황이다. 해서 이걸 방치하면 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어려워져서 문제상황으로 인식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 문제가 아니다해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인력과 자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있어 적정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좀더 과밀화되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해서 예를 들면 수도권을 억제하지말고 그레이트 싱가포르처럼 거대도시로 키우자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워낙 인식의 차이가 많고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이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혁신 주도형 균형 발전 전략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도형 발전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의 3대 Core 전략이 있음

이런 두 가지 큰 문제를 놓고 국부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가 라고 하면 저는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부국강병론에 대해서는 신 부국강병론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 주도형 발전에서는 세 가지 코어전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과 인재와 산업이 같이 가야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에서 기술 혁신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기술개발 평가 거래 기술 창업이나 이전 이런 프로세스를 놓고 본다면 각 단계 단계가 분절이 되 서 전체 경제가 기술에 기반 한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로 대기업 위주의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 내부에 중앙 연구소 같은 조직을 가지고 기술개발을 인 하우스로 하고있고 대학과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도 대학은 정부 R&D 예산의 31%를 사용하는데 특허출원이 0.5%입니다. 정부산하연구소는 55%를 사용하는데 특허출원이 2.9%입니다. 특허 출원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저는 이 속에 우리나라 대학과 연구소가 수용하는 내용이나 수준 유형이 시장 산업 기업의 어떤 요구 수요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단계에서 시장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활용이 안 됩니다. 출원 자체도 적지만 활용도 안되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80개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별로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기술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깐 기술이 하나의 재화로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품을 거래하는데 노출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수요 공급이 연결이 돼서 거래가 되는데 기술은 평가가 되지를 않고 거래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결합되지 않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의 문제는 창의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문제와 전문 산업인 양성 사업을 정부가 하고 있고 BK 경우에도 포스트 BK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방향은 잘 잡혀 있는데 실제로 산업과 연계가 얼마나 살아날 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하고 적어도 평균 2년은 더 교육을 시켜야 하고 한 사람 당 1억 이상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균형 발전이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지역에 다수의 역동적 발전 거점을 형성하는 것임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식은 수도권 하나의 발전 축으로 이 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구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다수의 발전 거점을 만들어서 국가를 끌어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를 조사해보니 그 국가들의 국가별로 가장 큰 도시의 인구비중을 X축에 놓고 1인당 GDP를 Y축에 놓으니깐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수도권과 인구비중이 15%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Z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전체의 창의력을 나타내는 축을 더 세워서 창의력과 분산구조냐 집중구조냐 하는 것을 다시 결합하면 훨씬 더 예측력이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극 분산형 국토 구조의 형성

수도권 과밀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1의 대안 거점인 충청권에 행정중심 복합 도시를 통해 강력한 발전 축을 구축함

기본적으로는 집중구조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구조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서로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관계나 연계발전 구조를 만드는 게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시각에서 우리나라 국토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8페이지의 개념도에서 한반도의 국토공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 이론 중에 린 밴드 이론입니다. 대륙중시와 해양중시의 이론이 있는데 양자를 잘 접목 할 수 있는 이론이 린 밴드 이론이고 일종의 동물에 비유한다면 양서류가 되겠지요 과거 냉전시대까지는 반도국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베트남, 말레이, 발칸, 이탈리아 반도는 거의 예외 없이 침략을 당해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가장 고통이 극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시기를 생각해본다면 해안선을 따라서 다수의 대외 개방거점을 만들고 내륙에는 강력한 혁신 거점이나 성장거점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고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그런 구조로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았고 진행되고있지만 1차 적으로 수도권의 인구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면서 충청권에 강력한 발전 축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닌가합니다. 그런 경제거점을 만드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아산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좋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있고 충북 오성·오창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있고 남쪽은

대덕에 R&D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행정도시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기능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한 마리가 아닌 몇 마리의 날랜 말을 키운다는 생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적정하게 차등 배치
하면서, 지역별 다수
의 '산업특화단지'를
조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건설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제2, 제3의 큰 발전거점을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최근에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지역의 산업화 전략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의 방향은 지역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산업특화 단지를 조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예가 충북 오성의 생명과학단지입니다. 복지부가 산하의 5개 기관을 오성으로 내려보내고 보건의료 생명과학분야의 기업이 160개 정도 입주 의사를 표시하고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특화된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해양수산부 광주는 산업자원부 전남은 정보통신부식으로 각 부처들이 산하기관이 집중하는 곳에 그 지역을 위한 발전 계획을 만들어내고 기관은 기관대로 지방 발전과 연관된 계획을 만들어 지자체와 힘을 합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른 쪽으로는 산업특화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준비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6쪽에 보면 각 지역 별로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정책이 추진되고있습니다. 표에 나온 대로 박대통령 시절부터 각 지역에 여러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생산중심으로 되어있습니다. 연구기능이 취약하고 대덕의 경우는 정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기능 마저도 연구자들이 SCI에 등재될 수 있는 논문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있

지 기업이 요구하는 쪽과는 거리가 멀고 여기에 연간 2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되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술하기 이전에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대덕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시급히 사업화 산업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소가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대학도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시장과 산업에 다가서는 조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타의 지역의 산업단지인 인근의 대학과 긴밀한 산하협력 체계를 만들고 다양한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활발한 토론과 공동연구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파주는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단지인데 이곳은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조치로 효율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항공대가 가지고있는 여러 가지 기술 역량이 단위 대학 중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이고 이곳은 대학이 주도하는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등 적극적 발전을 추진

수도권은 대체로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여러 가지 규제장치가 있는데도 집중이 되니까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대로 육성한 정책이 없어서 참여정부에는 적극적인 지방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이런 변화가 진행이 될 때 수도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의 관점에서 수도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도권에도 자생적인 클러스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힘을 보태서 마찬가지로 대학과 연구기능과의 단절을 보완한다면 인구를 늘이지 않으면서도 클러스터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삶의 질과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근의 대도시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의 경우에는 OECD기준으로 환경수준이 최하위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좀더 노력이 필요하

고 수도권외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도시로 가야하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일부는 다이어트를 하고 나머지는 글로벌 기업들 센터가 들어와서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런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시민 50%이상은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자동차나 자녀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국의 경우 인구가 730만 정도 되고 외국인이나 마이너리티가 190만 정도 살고 사용언어는 300가지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증권거래의 3분의 1일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은 1,000만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경기도 1,000만 인천이 260~270만 정도 되는데 서울의 인적 구성과 산업구성과 산업활동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세계도시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하지 공공기관 이전을 막는 데에 노력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 늘 고민하는 문제이고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업적이 워낙 뛰어나고 앞으로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개 이상의 국제적 R&D센터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런 기관은 서울에 위치할 텐데 도대체 그 기관의 연구자가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을 수도권이 만들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정책에 대해 총괄을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동반성장 구조를 만드는 게 단순히 현안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제기했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이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단순히 분배 정책으로 생각되어질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성장 동력 저하의
근본 원인은 정부
규제로 기업의 자율
성이 보장되지 못하
였기 때문

(노부호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 경제의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고도 성장 동력이 소진되었다고 하시고 근본적으로 창의력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이셨는데 동시에 성장 동력의 소진 원인의 하나로 불균형 발전이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이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정책 차원에서 자율성이나 기업이 정신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못한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은가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행정복합도시건설보다는 규제완화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 초점이 갈 수는 없겠는가 하는 양쪽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 육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지만 의문점은 그동안 왜 지방이 발전되지 못 했느냐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P에 최대 도시에 인구 비중이라고 비교를 하셨는데 로마 파리 런던도 봤습니다만 그쪽은 봉건제도가 발달되어서 지방이 발달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적 체제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래서 단순 비교보다는 결국은 왜 우리나라가 인구집중으로 이렇게 되었나하는 근본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서 각 지방자치체가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서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해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조금 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클러스터하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상호작용으로 만나서 일을 같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에는 여러 가지 각 기관이나 구성요소들의 의욕이나 능력이 갖추어져야 잘 형성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모이기만 해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능력을 계발하고 경쟁을 해야지 이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대학은 3不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 한 대학의 성장이나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 같고 그 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못 하게 하는 기초로서 자율성이 없는 것도 포함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부처와 기업의 유기적 협조 등의 소프트웨어 측면이 미흡

(이영남 이지디지털 사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많이 걱정되는 부분보다는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잘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거시적인 것도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한다고 느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중소기업인으로서 제가 단적으로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피부로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정책을 내면 항상 높으신 분들의 정책과 필드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오늘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20년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해 왔는데 아직도 제조업에 긍지를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어찌다보니 협력업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체를 옮겼는데 저는 전라도 광주인데 가서 직원들 인터뷰를 하다가 수도권에 있으면서 모르고 있었던 걸 많이 알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다보면 일류대학 출신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구하기 힘든데 그럼 결국 지방대학 나온 직원들을 기숙사 제공하면서 연봉을 주면서 하면 일류대학 직원들보다 더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직원도 적응을 못하고 내려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는데도 저도 지방으로 옮겨야지 했는데 문제점을 보니까 지방에서는 투자유치를 대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가령 어떤 중소기업들은 정보 대응해서 풀어 나가는 기업인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그 기준에만 적용할 줄 알지 그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고 지방에서

는 큰 덩어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것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버팀이 되는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은 다. 그리셨으니까 각 지방마다.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는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문제점들을 발견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립니다. 한가지 더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대해서는 저도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지만 기획예산처도 인블브되어 일을 해보고 R&D예산편성도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클러스터의 예산에 대비해서 아웃풋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부적인 것을 보면 항상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 먼저 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아웃풋 나오기 전에 건물 운영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유를 들어서 변칙적인 운용자금에서부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 돈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보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하드웨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프트 적인 기능 산업과 매칭되는 기능 학교와 연계되는 기능을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크게 벌려놓기보다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한 아웃풋을 낸 다음 늘려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또 우리가 문책을 받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능에서는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을 지원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유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1, 2년 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좋고 잘못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결단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지방 이전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각 지방 조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도 연계해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과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하나의 발전 모델은 한계가 있음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노 교수님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지금 기본적인 접근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는 못했는데 저는 아마도 다른 구조적 조건이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하고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국부가 창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 기업가 활동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방육성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이 권한과 자원을 다 가지고 지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중앙 의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과 관련된 행태도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의 덩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보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분권을 통해서 중앙은 슬림화하고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의 논쟁 중 하나가 분권정책과 분산정책의 선후 관계와 속도에 대한 토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조정하지 않으면 분산정책을 통해서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분권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면 재정력의 차이가 더 커집니다.

수도권 경우에 서울이 95%이상이 되고 경기도가 80% 전남은 20%이고 굉장히 격차가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권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될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클러스터 정책과 관련해서 대학의 3불 정책 등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이곳에 굉장히 복잡하고 한국사회의 어려운 문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은 토론과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제가 한가지 제기하고 싶은 건 교육에도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쟁을 조장하고 어떤 경쟁을 줄여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는 경쟁은 필요한데 대학 입시에서 과도한 등수 경쟁, 전 과목 시험보고 과도하게 등수 경쟁하는 이 경쟁은 모두에게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창의력 경쟁을 할 것인가 경제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지 수능 성적대로 위에서 잘라가고 수능의 사다리와 대학 서열의 사다리가 너무나 명백한 상태에서 모든 시험과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면 기업이 지방으로 갈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를 놓고 지방의 투자를 북돋아주는 정책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강력한 정책이 기업도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도시 부분은 논란이 많았고 이번에 네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일단 투자의향이 밝혀진 규모가 5조 원 정도이고 해남 영암 쪽에 만약에 선정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12조 원 정도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왜 강력하나 하면 기업도시로 지정이 되는 곳에는 각종 규제가 패키지로 완화가 되고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조세 완화 정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 수단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학연관이 정보를 공유하여 기술과 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기획중

그 다음 재경부가 관리하는 정책중에 지역 특화 발전 특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특구 제도는 우선 교육이나 관광 같은 등등의 분야 분야에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완화 해줍니다.

마치 전국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다 풀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만 구멍을 뚫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인데 이곳에 24개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투자규모로는 민간투자와 같이해서 9,000억 원 정도 투자가 수반 될 것으로 보고있고 두 가지 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다른 어

면 정책수단 보다는 이 정책과 연결해서 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하게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정책을 하는데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은 클러스터 정책도 아니고 산학협력정책도 아닙니다. 키워드가 커넥트입니다. 그래서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산과 학이 따로 놓고 입으로는 산학 연관 협력을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안 되는게 산학 연관 단절상태인 것입니다. 산학협력도 어느 고등학교 출신끼리 하는 것이고 전국을 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미국의 UCSD를 방문을 했는데 같은 UCSD산하에 커넥트 프로그램이라는 특별 프로그램 하는 곳을 갔습니다. 기술분야의 산학협력은 미국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누가 기술을 개발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잘 평가를 못하고 따라서 새로운 프론티어 기술과 또 투자자금이 잘 결합이 안되고 따라서 이곳도 마찬가지로 누가 에인절이나 새로운 기술의 에인절 투자자가 누구냐 제가 봤더니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돈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나 동창과 같은 거라고 합니다. 실리콘 밸리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첫째 정보의 생성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보 소통이 안되고 그러니까 400조 500조 되는 돈이 부동산에 돌아다니지 대학이나 연구소에 오지를 못하는 거지요 이걸 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창안한 게 커넥트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게 기막힌 원리다. 해서 소개해주는 분이 마지막에 connect makes milk라고 합니다. 커넥트라는 것을 수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학협력에도 이것을 적용을 하고 또 모든 클러스터에 이것을 추진 팀과 미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

는 산하협력체계 또 그 지역을 넘어서서 모든 전문가 연구자 국내외 가리지 말고 연결을 해서 혈맥이 뚫리게 하는 것에 저는 한국 경제를 풀어 갈 수 있는 해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곳에 투자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참여정부의 국가 비전은 무엇인지?

(이경룡 서강대학교 교수) 성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 정연한 가운데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성 위원장님께서 정권 출범한 이후부터 핵심 인사로서 중추적인 이념적인 사상적인 기타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런 중추적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사회가 이념적이나 사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심이 상당히 들떠있고 흥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미래에 불확실성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상적인 이야기이지만 현정권의 국가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사회로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건지 그런 추진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략 방향이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근래 이야기인데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한 분야조차 문제된 분야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같은걸 해보면 지지도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지도 하락이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 일전 인천에서 맥아

더 동상을 타도하자는 극단적인 반미 친북 세력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집단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가 조용히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현 정권 및 핵심 세력에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많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윤리적인 수준이 충분한지 의심이 갑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바탕이 되어야 개혁이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궁금합니다. 끝으로 현재 집권당 인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열린 우리 당에 많은 국회 의원들이 있는데 현 정권에 좌파적이고 사회적인 개혁 코드와 맞지 않는 인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적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상당히 엉거주춤한 그런 형태로 국가를 분열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현실적으로 평가 시
스템이나 인재의 부
족 등 국가 균형 발
전 전략을 추진할
역량이 미흡함

(강정호 전 경남 정무부지사) 저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일을 한 경험에서 비춰보면 결국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역량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기초 자치단체 234개의 역량과 또 경남을 예로 든다면 20개 시·군의 성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있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연례적으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해서 등수화하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IMD나 WEF에서 그런 발표를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산업정책연구원에서 그런 평가모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속 되어있는 공무원의 질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을까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 도청의 경우에 간부 100%가 지역 출신의 고졸입니다. 육사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창의력이라든지 핵심역량이 있는 분들이 진입하기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균형 발전이 어찌 본다면 돈이라든지 그림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창의력이나 내부적인 핵심 역량이 좀 더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 정부의 기본적인
제도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일
것임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토론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당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기 힘든, 제 능력을 벗어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와 또 전략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있고 추상 수준을 높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인 제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골격 속에서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결합되는 나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모델이 시장경제라는 경제체제와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가지고있는데 그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게 잘못 이루어지면 민주주의라는 것을 남용해서 온갖 형태의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87년부터 보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불을 붙이는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씨뭉치에 관한 문제를 개인단위를 넘어서 공익을 생각하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와 관행이 정착이 되어야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다양한 형태로의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공이전 정책을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도 협약을 체결했고 또 정부와 노조와도 체결해서 갈등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진행하고있습니다. 민

주주의라는 정치적 토대 또 시장경제라는 정치적 토대 하에서도 세부적으로 볼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나라를 정책이 가야하는 문제에 대해 신 부국강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부국과 강병은 전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라가 부유해야 하고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합니다. 다만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국의 럽스펠드 장관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주목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문제도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도 모험적인 정책으로는 스스로 내부 국민을 살리거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정확한 인식을 하게 해서 남북이 제대로 협력하고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치 유럽나라들이 EU로 통합되는 것처럼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을 보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가 지역에 클러스터를 만든다하고 여러 지방도 강한 지방을 만든다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부국에 직접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이루었을 때도 남쪽에는 서울만 힘이 있고 북한은 평양만 힘이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그런 국가가 아니고 여러 지역에 발전 점을 가진 국가가 강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지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도가 왜 하락하는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점에 대해 겸허하게 생각을 하고 지지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맥아더 동상 문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속 좁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윤리의식 문제는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도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파적 인사를 이야기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좌인가 우인가 하는 것은 상대적인 요소가 있

다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말해서 참여정부에 좌파인사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통적인 좌익과 2차대전 이후의 서부의 사회 민주당계열의 의회주의 노선과 비교해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도 방향전환을 했지만 과거처럼 국유화를 주장하는 좌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복지 쪽에 관심을 두는 사람 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신장하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구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대의 사유 재산을 부정하고 국유화를 하고 중 과세 정책을 통해 부자들의 자리를 없애는 그런 의미의 좌파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논의는 자칫 레이버가 가지고있는 독자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에 관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차등 보상을 하고, 인력 부족 문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임

그리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한 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차등보상을 해서 노력하는 쪽에 지원을 더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자질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노동경제학이나 노동 시장을 보면 내부 시장론 이란게 있는데 정부의 고시출신자들만 올라가는 이 구조는 내부 인력노동시장의 극치이지입니다. 엔트리 레벨에서만 문이 열리고 나머지는 닫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개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자체의 혁신작업이 너무 더디게 되어서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모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별로 문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의 근무하는 분들 퇴직한 분들까지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분이나 대학에 근무하는 분, 기업체 활동하고 은퇴하는 분들 그런 우수한 분들이 대거 지자체에 들어가야 변화가 올 것입니다. 현재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지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더 생산적으로 쓰는 행동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문제 개방하고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클러스터 발전을 위해 행정 구역 개편이 필요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공공기관 이전하고 혁신도시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같은걸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도의 역할 같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보면 읍 면을 없앴거든요. 저는 큰 것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도청 공무원이 중앙공무원 비슷하게 권위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시·군에 대해서 그런 규제 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책의 68페이지에 보면 배우자의 직장 알선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어프로치로 이런 걸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력과 국토에만 국한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혁신 주도형 발전'의 본래 개념과 동일시 될 수는 없을 것임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기존의 논리적 또는 이론적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셨다고 봅니다. 그중 마이클 포터의 경제 성장 모델을 사용하셨는데, 들으면서 의구심이 나는 것은 지방 균형 발전이 혁신 주도형 발전과 동일시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분권·분산만 되면 혁신 발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관 관계가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국가 발전이라는 개념을 경제 발전과 국토 발전에만 국한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는 국토,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에는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원장님께서서는 다극 분산 구조로 전환해야만 국력 증진의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상반되는 개념인 집중과 선택이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효과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발전의 과실 분배, 산업 정책의 시너지 효과 상승 등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반드시 국가 균형 발전에서 나오는지는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요약하면 정권이 추구하는 필로소피 국가의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시된 전략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의 본래의 취지와 구체적인 전략이 대응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인 공공 기관의 지방 분산 정책은 정치적 배려가 많이 들어갔을 뿐이지 혁신주도형 전략에 부합되는 정책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의 여지를 남깁니다.

광역 자치 단체가 없을 경우 광역 조정 업무의 공백이 우려, 대신 근무 인원을 줄이고 업무도 기획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현오석 소장님의 질문 중에 도(道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아젠다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 야가 이제 도를 폐지하고 행정계층을 단순화하자 는 여/야 모두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아마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소카와 前 수상도 그렇고 오마에 겐이치라는 평론가도 일종의 연방제 주장을 하는데 중간의 광역지자체의 강화하자는 쪽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없애고 300개 정도를 개편해서 가자는 쪽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의 역할을 계속 하자는 쪽과 이것을 60개정도로 개편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중간쯤 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없애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하는데 광역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도가 편하다고 보고 다만 현재와 같은 조직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고 인력도 많아서 이걸 대폭 줄여서 마치 기획사나 컨설팅 회사처럼 대폭 축소하고 개별 산하 시 군에 대해 조정업무를 기초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직장알선은 주 대상이 교사나 교직에 있거나 공무원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직장알선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것처럼 되어서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직종이 제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은 단순한 분권·분산이 아닌 지역 혁신을 바탕으로 함

혁신주도형과 균형 발전을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말씀과 분권·분산하면 그게 혁신 주도인가라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현재 큰 흐름이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요소투입을 늘이는 쪽으로 해왔다는 점과 이것이 불균형 발전하고 병행이 되어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요소투입형은 혁신주도형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고 불균형은 균형 쪽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서 두 가지가 결합된 모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균형발전 전략을 하더라도 단순히 중앙재정을 넘겨서 푸는 것보다는 지역마다. 소위 RIS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NIS라고 하고 지역차원을 RIS라고 하는데 국가 전체의 혁신체계와 지역단위의 혁신체계를 구축 가동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핵심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인재산업이 제대로 자생력을 가진 결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발전전략 또 단순한 SOC 계획이 아니고 세 가지 요소를 결합시키는 쪽으로 설계가 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지역에 다. 풀어 버리는 방법보다는 각 지역의 비교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리 및 교열

주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 02-3669-4030